



미국 차기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망과 시사점¹⁾

김 윤 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yoonkkim@ewha.ac.kr)

유 학 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hsyoo7@keei.re.kr)

1. 서론

미국의 45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2016년 11월에 치러졌고, 그 결과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당선되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러하지만, 대통령은 임기 동안에 자신의 색깔을 갖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오바마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지만, 현재의 대통령과 차기의 대통령은 다른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을, 트럼프 당선자는 공화당을 정치적 배경으로 갖는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의 상이성은 수립정책, 비전, 국정운영 철학, 그리고 행정부의 색깔을 다르게 만들 것이다. 이는 경제, 안보, 외교, 보건, 에너지·자원 등의 모든 분야에서 구체화된다. 예를 들어 에너지정책의 측면에서 본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8년 동안에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목적 하에서 화석연료를 축소하고,

청정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려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비해서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과정에서 연설 또는 정책 정강을 통해서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국 내의 석유, 가스, 석탄을 개발·생산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자국 내의 고용을 확대하고 에너지독립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온난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반대하고 오바마 정부의 관련 정책들을 비판하였다. 트럼프 당선자의 이러한 발언과 공화당이라는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미국 차기 행정부가 보일 에너지정책은 기존의 그것과는 차이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 45대 대통령 당선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에너지정책을 예상하고, 기존 에너지정책에서 나타날 변화를 전망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트럼프 당선자의 에너지정책과 기후정책 관련 공약들을 살핀다. 3절에서는 트럼프 당선자

1) 본고는 유학식, "미국 대선 후보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공약 비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29호(2016a)와 유학식, "미국 차기 행정부의 에너지정책 전망과 영향,"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42호(2016b)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요약한 것임. 또한, 이는 2016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출연연구사업 "미국 차기대선과 청정 에너지 정책논의 및 전망 공동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의 정치적 배경이며 지지기반인 공화당의 에너지정책 기조를 민주당의 에너지정책 기조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한다. 이는 양당 에너지정책의 철학적 배경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절에서는 2절과 3절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트럼프 당선자가 구성하는 행정부가 수립할 에너지 및 기후 관련 정책들의 변화방향을 전망한다. 5절에서는 이러한 미국 에너지 및 기후 관련 정책의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살핀다.

2.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공약

가. 화석에너지의 확대

트럼프 당선자는 유세기간 중에 일관되게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국 내의 석유, 가스, 석탄을 개발·생산하고 수출을 확대하여 자국 내 고용을 확대해야 하며, 미국이 중동지역에 대한 석유 의존을 벗어나야 하며, 에너지독립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OPEC과 외국의 국영석유기업들이 생산량을 조절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하여 답합하고 시장지배력을 갖고, 이를 이용하여 국제석유시장을 조작한다고 규탄하였다.

이러한 비판 후에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 내에서 석유 및 가스를 최대한 개발·생산하고 활용해야 하며, 미국 내에서의 석유 및 가스개발을 촉진하고 생산을 증가시

키기 위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각종의 규제들을 철폐해야 한다고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더하여 미국의 에너지시스템이 국제유가의 변동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취약점을 극복하고 탈피하려면 미국 내에서의 원유 생산량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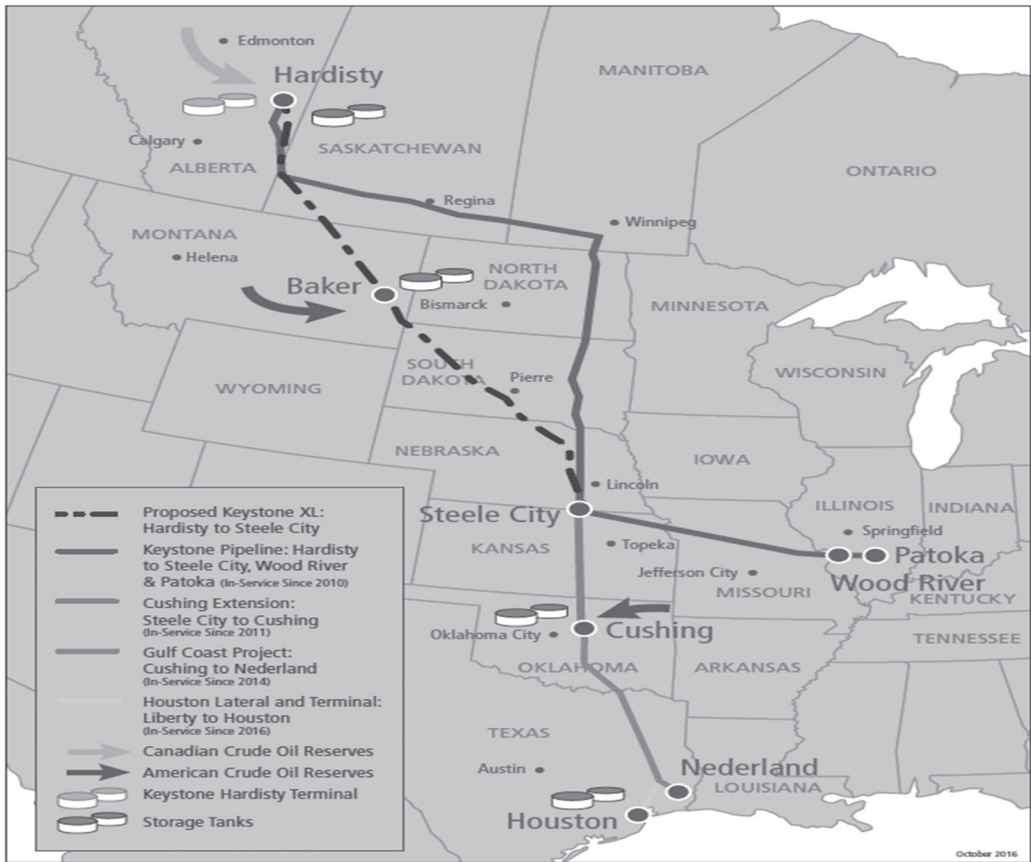
이러한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은 공화당의 에너지정책기조와 맞닿아있다. 공화당의 2016년 대선 정강(2016년 7월)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유전 및 가스전의 개발에 대한 연방정부의 승인에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향후에 석유·가스 상류부문 개발에 대한 인·허가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 11월에 환경오염 및 자연훼손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제시하면서 TransCanada사의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하지 않았고, 이 프로젝트는 무산되었다.²⁾ 키스톤 XL 프로젝트는 캐나다 알버타주(州)부터 미국 네브라스카주(州)까지의 파이프라인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존 파이프라인과 연결되면 캐나다산 원유를 텍사스주(州)까지 수송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의 건설 프로젝트가 미국의 에너지안보와 고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이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가 에너지프로젝트 인·허가를 지연시킨다고 비판하였으며, 수송 파이프라인, 수출인프라 등과 같은 에너지 인프라 건설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여 인프라 관련 사업들을 촉진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2)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구간은 캐나다 알버타주(州) 하디시티에서 시작하여 미국의 몬타나, 사우스 다코다를 거쳐 네브라스카주(州)의 스틸시티까지임. 스틸시티에서부터는 기존 파이프라인과 연결되어 오클라호마의 원유 허브인 쿠싱허브로 연결되며, 텍사스 주의 휴스턴 및 네덜란드 정유지대까지 연결됨. 파이프라인은 36인치 규격으로 원유수송 용량은 83만 b/d로 설계되었음.



[그림 1]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경로



자료: 키스톤 XL 프로젝트 홈페이지(<http://www.keystone-xl.com/home/keystone-xl-kxl-oil-pipeline-maps>, 접속일: 2016.11.11), 유학식(2016b)에서 재인용함.

나.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CPP)의 폐지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CPP)은 2015년 8월에 오바마 행정부가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법규명령(regulation)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는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2% 감축으로 설정하고, 기존 화력발전소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발전부

문의 핵심 감축정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CPP는 버지니아주(州) 등과 같이 석탄의존도가 높은 27개주(州)가 반대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연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다. 연방대법원은 CPP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도출될 때까지 CPP의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청원을 2016년 2월에 인용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현재는 시행이 중단되어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유세기간에 CPP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의 잘못된 화석연료



규제를 모두 폐기할 것이라고 공약하였다.

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반대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8년 동안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종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13년 6월에 기후행동계획으로 상징되는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청정에너지 확대 및 화석에너지 기반 화력발전 규제 등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2014년 11월과 2015년 9월에 미·중 기후정상회담을 실시하였고, 2016년 8월에는 파리협정을 비준하였다.³⁾ 미국이 2015년 3월에 제출한 “자발적 감축 기여(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에 따르면, 미국은 온실가스를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5~28% 감축하며, 최대한 28%를 감축하도록 노력한다.

트럼프 당선자와 공화당은 기후변화 자체를 부인하며,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온난화가 초래된다는 것의 여부 자체를 부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부인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정책 도입을 반대한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파리협정 비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와 공화당이 파리협정을 거부하는 것은 파리협정의 비준권이 오바마 대통령이 아닌 상원에 있으며 상원의 비준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것에 근거한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나 녹색기후기금(GCF)에 제공하

는 재원 공여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그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연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세액 공제제도, 생산세액공제 등과 같은 지원정책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편애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하며, 이에 비해서 석유·가스부문은 규제를 받으므로 에너지원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⁴⁾

3. 공화당과 민주당의 에너지 및 기후 관련 정책 비교

가. 공화당

공화당은 2016년 7월 18~21일에 개최한 전국전당대회에서 2016 대선정당을 채택하였다. 이 정강들 중에서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정책들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 및 기후분야에 대한 공화당의 정강은 “에너지 새시대”(A New Era in Energy)와 “환경의 진전”(Environmental Progress)으로 구분된다.

공화당의 대선 정강 중에서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부분은 첫 번째로 자국 내 에너지자원의 생산 확대와 수출 촉진, 두 번째로 연방정부 주도의 규제 정책에 대

3) 파리협정은 2015년 12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합의 및 도출되었음. 파리협정은 당사국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이 되면 발효조건을 충족하며, 그로부터 30일이 경과 후에 발효됨. 파리협정은 이 조건을 만족하여 2016년 11월 4일에 발효되었음.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8월 29일에 파리협정 비준서에 서명하였음. 이 비준서는 2016년 9월 8일에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제 11차 G20 정상회담에서 제출되었음.

4) 투자세액공제(ITC)는 재생에너지 설비투자액에 대해 일정 공제율에 따라서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며, 태양광발전의 경우에 공제율은 2016년의 30%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2년에는 10%로 축소됨. 대형 풍력발전의 경우에 공제율은 급격하게 축소되어 2019년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음. 생산세액공제(PTC)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에 비례해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풍력발전의 경우에 일몰기한은 2019년 12월임.



한 비판, 세 번째로 주정부 중심의 에너지 및 환경정책 추진, 네 번째로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환경 부문에 관련해서 보면 특정 정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민주당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철학적 대척점에서 주로 비판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

“에너지 새시대”(A New Era in Energy)에 따르면, 미국의 풍부한 에너지자원과 세계 최고수준의 자원개발 기술자 및 광부들을 규제로 막지 않고 에너지전략에 활용한다면 에너지안보가 수세기 동안은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에너지는 국가안보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공유지 개발 등을 통해서 자국 내 에너지생산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법제화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국 내 자원 생산이 확대되면 미국 경제의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시킬 것이므로 OPEC과 외국 국영석유기업들의 석유시장 조작도 유효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공화당은 공유지와 대륙붕 근해(Outer Continental Shelf)에서의 탐사 및 생산을 지지한다. 이 지역에서 즉시적으로 자원을 개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탐사는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화석연료 뿐만 아니라, 광물자원에 대해서도 미국은 희토류(rare earth), 경석 광물(hard rock minerals)의 중국 의존도가 높으므로 공공토지에서의 광물 생산 인·허가를 촉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공화당은 미국의 에너지생산자들이 해외시장에 자국 내 생산 자원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에너지자원 수출은 고소득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동시에 무역적자 개선, 경제성장, 동맹국 및 교역국과의 에너지안보 강화의 효과도 갖기 때문이다. 이에 공화당은 적극적으로 에너지 수출 기회를 확대할 것이며, 양자 및 다자 합의를 통해서 미국산 에

너지를 수출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공화당은 2016년 4월에 장기적 안목으로 에너지정책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에너지정책 및 현대화 법”을 통과시켰고, 공화당 정당을 통해서 이 법에 대한 지지를 거듭 표명하였다. “에너지정책 및 현대화 법”은 신재생에너지 촉진,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온실가스 배출 감축, 자국 내 생산 천연가스의 수출 촉진 등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공화당은 주정부 중심의 환경규제와 자원개발 관리를 지지하고 있다. 환경보호와 자원개발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주체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의회는 연방정부의 소유지라고 하여도 그 연방토지가 지리적으로 속해 있는 주정부가 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정부에게 규제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더하여 공화당은 연방법원이 연방토지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 BLM)의 수압파쇄법 규제에 대한 시행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을 지지한다고 언급하였다.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수압파쇄법, 메탄 누출, 수평시추법 등에 대한 보다 적절한 관리 및 규제 주체라고 평가하였다.

공화당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비판하면서, 정부는 에너지생산자들 중에서 어느 한 쪽을 편애하면 안된다고 언급하였다. 국제분쟁이 격화되고 테러의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 예산은 삭감하면서도 국방부에 2025년까지 필요한 전력의 25%를 신재생에너지원에서 충당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더하여 이는 모두 상식을 무시한 환경극단주의자들의 방식이므로 의회가 이러한 조치들을 반드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종류의 에너지원은 정부의 보조금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경제원리를 따라서 개발되어야 하며, 민간 자본이



비용효과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원자력발전에 대해서 공화당은 토륨원자로 등의 개발을 위한 원자력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였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가 원전폐기물 장기저장에 대해서 “원자력폐기물 정책법”(Nuclear Waste Policy Act)을 따르지 않고 유카 마운틴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프로젝트를 무산시킨 것을 비판하였다.

공화당은 어떠한 형태의 탄소세도 반대한다고 하였다. 탄소세는 에너지가격을 인상시키므로 현재에도 높은 에너지비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미국의 가계에 더욱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추가하여 민간 주도의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은 개발되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공화당은 에너지원에 대한 입장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의 각종 정책과 절차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우선 민주당의 화석연료 규제 정책을 비판하였다. 민주당은 “자원을 땅 속에 그대로 두자”고 주장하며, 석유 및 가스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EPA를 통해서 화석연료 산업을 규제하여 고용을 저해하고, 저소득층에게 높은 에너지비용을 전가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키면서도 이러한 점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그 사례로서 CPP를 제시하였고, CPP는 현재 반대소송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CPP를 완전히 폐지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리고 민주당이 미국 내에 석탄부존량이 많고, 석탄은 청정하고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자국 내 자원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채굴 특허, 석탄광업 종사자와 그 가족들을 민주당의 급진적인 반석탄정책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더하여 공화당은 민주당의 사업 인·허가 지연이 에너지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예를

들어 원유·가스전을 개발할 때에 주정부의 승인에는 평균 30일이 소요되지만 연방정부의 승인에는 7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더하여 30년 전에 BLM은 1,220만 에이커에 대한 개발을 승인했지만, 2014년에는 이의 1/10의 면적에 대한 개발만을 승인하였다. 원자력발전은 안전성을 갖추었지만 30년간 승인한 사례가 매우 적고, 오바마 행정부는 수력발전소의 재승인에도 몇 년간의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건설 승인을 거부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념적 접근에 의한 에너지정책 실패라고 평가하고 공화당은 이 사업을 재추진하여 완공시킬 것이라고 공약하였다.

“환경의 진전”(Environmental Progress)에 따르면, 공화당은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이 자연보전의 성실한 책무를 담보할 최선의 방법이며, 정부의 통제는 적절하지 않고 정부의 규제로 개인의 소유권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환경규제를 위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입법은 엄격히 제한하고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s)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반드시 보상받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규제보다는 소유권 보장이 우선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환경질을 개선하려면 지속적 경제성장과 기술진보가 필요하며,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8년간 미국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면서도 환경개선 효과는 미미했다고 평가하였다. 공화당은 과거 오염물질 저감, 재활용 활성화, 생태계 붕괴 저지에 기여하였으며, 대기질과 수질은 수십년 전에 비해서 개선되었고, 추가적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노후장비들의 자연적 대체를 통해서 대기오염은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공화당은 환경정책에 대해서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연방정부 부처의 전격적인 개혁을 통해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공화당은 국가의 대기질 기준



수립 권한을 의회로 돌려주고 “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에 따라 승인절차를 현대화하여, 대기오염기준에 대해서 법적 소송이 남발되고 중요 프로젝트가 좌절되어 고용이 축소되거나 성장을 저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민주당의 급진환경론자들은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환경 위기’라는 환상을 지탱하기 위해서 더 많이 규제하고 더욱 환경주의로 치달아야만 하며, 현재의 개선된 환경도 여전히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공화당은 환경규제에 대한 책임을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며, EPA를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와 같은 독립적이고 초당파적인 위원회로 변화시켜서 ‘정치화된 과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사법접근 평등법”(Equal Access to Justice Act)을 개혁하여 환경활동가들에 대한 지원금 상한을 설정하고 지원금의 규모를 공개하겠다고 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공화당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들, 특히 장기 전망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냉정한 데이터에 기초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런 원칙을 공직자, 차기 대통령 당선자, 그리고 모든 행정부처에서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은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을 모두 거부하며, 이는 단지 그 문서에 서명한 서명인의 개인적 약속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였다. 상원에 제출되어 비준되기 전에는 이렇게 개인으로서 서명한 어떤 협정도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고 부언한다.

미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공하는 재원공여도 1994년 “외교 관계 권한법”(Foreign Relations Authorization Act)에 의거하여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법은 팔레스타인을 하나의 국가로, 그리고 회원국으로 인정하는 UN 산하 기구

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금 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의지만으로 UNFCCC와 녹색기후기금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언급하였다.

나. 민주당

민주당은 2016년 7월 25~28일에 개최한 전국전당대회에서 2016 대선정당을 채택하였다. 민주당은 이 정강에서 우선 기후변화 위협의 실재성, 온실가스 감축 당위성 및 목표를 확인하고 있다. 에너지 및 기후 분야에 대한 민주당의 정강은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Building a Clean Energy Economy), “환경 및 기후정의의 확보”(Securing Environmental and Climate Justice), “공유지와 수질 보호”(Protecting Our Public Lands and Waters)로 구분된다.

이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이며, 이미 미국 사회는 이상기후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민주당은 기후변화대응을 통해서 적정 소득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와 파리협정 공약 등을 준수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민주당은 미국이 21세기 중반까지 청정에너지만으로 에너지공급을 달성해야 하며,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와 대기질 보호를 위해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청정에너지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미국 정부는 자연자원과 공유지 및 수자원의 ‘책임을 갖는 관리자’(responsible stewards)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Building a Clean Energy



Economy)에 따르면, 청정에너지의 목표는 10년 내에 전력공급의 50%를 청정에너지원으로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4년 내에 5억 개의 태양광패널을 설치하고 미국의 전체 가정에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을 공급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전력망을 현대화하여 모든 부문에서 낭비를 줄이고, 미국 제조업이 최고의 청정성과 효율성을 갖추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승용차, 보일러, 선박, 화물차의 효율을 개선하고, 청정연료를 확대하며, 전기차를 보급하여 석유소비를 감소시키도록 수송부문을 개선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신규 투자를 확대하고 도심 및 외곽지역에 자전거 및 보행자 인프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하였다. 더하여 이러한 노력으로 수백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정과 사업체의 에너지비용을 줄여 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미국에서는 석유·가스기업에 대해 시추·개발비, 리스비, 지질·지구물리학 비용 등을 상각으로 소득에서 공제하고, 청정에너지에 대해서 생산세액공제(PTC)와 투자세액공제(ITC) 등을 적용하는 연방 세제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화석연료 기업들에 대한 조세 혜택 또는 보조금은 철폐하고 에너지 효율이나 청정에너지의 확대를 위한 조세혜택은 유지하거나 연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더하여 온실가스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고려하여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감축목표를 달성을 위한 탄소가격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청정에너지 경제의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 지역사회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연방정부는 청정에너지의 확대와 에너지효율의 개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지역정부 또는 지역사회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에 공급되는 전기를 100% 청정에너지원

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지지하며, 연방정부가 청정에너지 확대에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하였다. 인프라 투자 측면에서는 청정에너지 전력 공급을 위해서 기존 에너지 인프라의 안전성과 청정성을 강화해야 하며 신규 인프라의 건설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신규 송전망 건설에 대한 연방정부의 허가를 간소화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보다 풍력, 태양광 및 기타 재생에너지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민주당은 EPA가 수압파쇄법을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것이며, 수압파쇄법에 대해 강력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수압파쇄법은 주정부 또는 지역사회가 반대하는 경우에 그 지역에서는 제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메탄누출 규제에 대해서 모든 석유·가스생산 및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배출량은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최소 40~45%를 감축하고, 누출에 취약한 노후 파이프라인의 수리 또는 교체는 소득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승인 불허 결정을 지지하며, 앞으로도 연방정부의 정책 결정이 지구온난화를 ‘심각하게 악화’(significantly exacerbating)시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더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인프라 산업에서의 고용기준과 노동조합 결성, 그리고 참여권 적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가구에 재생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에너지빈곤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 취약계층을 배려하겠다고 하였다.

“환경 및 기후정의의 확보”(Securing Environmental and Climate Justice)에 따르면, 환경 오염 및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는 저소득층, 소수자 사회, 원주민 사회, 알래스카 원주민 공동체 등과 같은 취약계층에 편중되



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민주당은 피해지역에서 인력을 고용 및 훈련시키고, 오염지역 정화 및 청정에너지 보급, 효율개선, 인프라 복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전력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석탄생산지역이 소외되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면서, 석탄생산지역의 노동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고용회복과 경제 재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산정 제거(mountain top removal) 채굴과 같이 환경피해가 크고 위험한 채굴 관행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기업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모든 기업들은 기후위험을 포함하여 모든 위험들을 분석하고 이를 주주들에게 공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적 책임을 요구하겠다고 하였다. 주주들과 대중들에게 기

후변화의 과학적 실체를 오도한다는 혐의로 고발되는 화석연료 업체들은 사기죄로 조사하도록 사법기관에 요청하겠다고 하였다.

민주당은 공유지, 강, 해양, 습지, 호수, 북극 등과 같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보유한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협력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공유지와 수질 보호”(Protecting Our Public Lands and Waters)에 따르면 북극과 대서양 근해에서의 시추를 반대하며, 공유지에서 화석연료 임대제도(lease)를 개혁해야 하고, 공유지에서 오염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석탄 등의 채굴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연방 소유지와 수로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여 공유지와 강을 청정에너지 경제와 고용 창출의 엔진으로 삼겠다고 하였다.

〈표 1〉 공화당 및 민주당의 에너지 및 자원분야 대선 정강의 비교

구분	공화당	민주당
에너지정책 슬로건	- 에너지 새시대 : 풍부한 국내자원 개발 활성화 - 환경의 진전 : 이미 많이 개선되어 추가규제 불필요	-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 - 환경 및 기후 정의 확보 - 공유지와 수질의 보호
에너지믹스	- 정부지원이 없는 자유경쟁에 따른 에너지원 개발 및 공급 - 특정 에너지원에 편중된 지원은 불가 - 신재생에너지도 민간자본으로 개발	10년 내 전력공급의 50%를 청정에너지원으로 공급
석탄	석탄은 청정하고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자원이며, 탈석탄정책으로부터 석탄산업 종사자와 가족을 보호	석탄개발 축소
석유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와 국제유가 변동에 대한 미국 경제의 취약성을 낮추기 위해 국내 생산 증가	석유소비 축소
천연가스	석유와 함께 중요한 국내 자원으로 LNG 수출 활성화 필요	신규 천연가스발전소보다 청정에너지의 확대 장려
원자력	- 오바마 대통령이 원전폐기물정책법을 준수하지 않고 유카마운틴 프로젝트를 무산시킨 것은 잘못 - 토륨원자로 개발 등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	기후변화 대응에 원전 필요



〈표 1〉의 계속

구분		공화당	민주당
자원개발 및 인프라	연방공유지 석탄 개발	• 언급 없음	• 산정제거 채굴방식 규제
	석유·가스 개발 제한	• 공유지, 대륙붕 근해의 탐사 및 생산 지지	• 북극, 대서양 근해 시추 반대
	수입파쇄법	• 언급 없음	• 환경보호청(EPA)가 수입파쇄법을 규제하도록 법 개정을 포함하여 강력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추진 • 주정부 또는 지역사회가 반대할 때에는 수입파쇄법 규제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불허는 이념적 접근의 결과이며 재추진하여 완공하도록 함	•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불허 결정 지지
	석유·가스 산업 메탄누출 규제	불필요한 규제	• 석유·가스 생산 및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가스배출량을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최소 40~45% 감축 • 파이프라인 유지·보수와 교체에 의한 일자리 창출 기대
	공유지 자원개발	• 공유지의 화석연료 탐사 및 생산 찬성 • 공유지에서 희토류 등 높은 해외의존도의 광물 탐사 필요	• 공유지 석탄 임대(lease) 제도 개혁 필요 • 석탄, 석유, 가스 등의 화석연료 채굴을 단계적으로 축소 • 공유지에서 풍력,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자원개발 관련 환경규제 주체		•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규제의 주체가 되어야 함.	• 연방정부의 규제 중요
에너지 부문 조세 혜택		•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 원칙 • 조세지원은 어느 특정 에너지원에 치우치지 않아야 함	•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세지원 유지 • 화석연료 개발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폐지
에너지자원 수출		• 미국 에너지기업의 자유로운 수출필요 • 적극적 에너지수출 확대 정책 및 신수출시장 개척 • 에너지자원 수출터미널 건설 촉진필요 • 에너지자원 수출로 무역수지 개선 및 일자리 창출 • 동맹국의 에너지안보 강화	• 언급 없음
에너지인프라		•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재추진 • 인프라 건설사업의 인허가 승인 소요 기간 단축 필요	• 전력망 현대화로 전력낭비 개선 •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용 절감을 위해 신규 송전망 건설에 대한 연방정부의 허가 간소화 • 청정에너지 인프라 산업에 양질의 고용기준과 노동조합 결성 및 참여권 보장 지지
에너지빈곤 문제		• 언급 없음	• 저소득층에 재생에너지 저렴하게 공급하고 에너지 빈곤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

자료: 유학식(2016a)



<표 2> 공화당 및 민주당의 기후변화분야 대선 정강의 비교

구분	공화당	민주당
기후변화의 실재성	기후변화 관련 정보들은 감정적이고 정치적 성향에 치우쳐 냉정한 데이터와 편견이 없는 과학에 근거하고 있지 않음	우리 시대의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이며, 이미 미국은 이상기후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음
파리협정	- 파리협정 거부 - 상원의 인준없이 파리협정은 구속력이 없음	파리협정 및 감축공약 준수
온실가스 감축목표	언급 없음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80% 감축 - 파리협정의 공약 준수
탄소가격제 또는 탄소세	어떠한 탄소세도 반대	온실가스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고려하여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가격제 도입 필요
환경정책 및 환경규제 일반론	- 이미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 추가 규제 불필요 - 환경규제로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음 - 민주당 급진환경론자들은 낡은 방법론을 고수하며 규제의 효과는 미미 - 환경문제는 탑-다운 방식의 규제가 아니라 기술과 인간의 창의성으로 해결	공유지, 강, 해양, 습지, 북극 등 자연유산은 금전으로 환산불가능한 가치를 지니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발 제한 필요
환경정책과 경제성장·고용	환경주의자들의 과도한 규제로 성장과 고용이 저해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은 양립 가능
화석연료 규제	CPP를 포함하여 화석연료 규제들 폐기할 것임	CPP를 포함하여 대기오염 및 연비강화 정책을 유지 및 연장
연방정부의 역할	- 환경규제의 주체는 연방이 아닌 주정부 - 환경보호청(EPA)을 독립적 위원회로 변경	연방정부는 청정에너지 확대와 에너지효율 개선에 솔선수범하고 주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
환경 및 기후정의	언급 없음	-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의 충격이 저소득층, 소수자, 원주민, 유색인종에 집중되어 불평등 유발 - 이들에게 집중된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에너지효율 및 인프라 개선 필요 - 탈석탄정책으로 침체된 석탄생산지역의 노동자 및 가족의 고용 회복과 경제 활성화 지원
기업의 기후변화 위험 공시의무	언급 없음	- 모든 기업은 당면한 기후변화 위험을 분석하고 공개해야 함 - 의무불이행 또는 거짓정보 유포 시에는 법적 책임 요구
기후변화 국제협력	IPCC는 과학보다 정치적 이해를 따르는 집단이며, 팔레스타인을 회원국으로 인정하는 UNFCCC에 미국 정부가 재원을 공여하는 것은 미국법상 불법이며, 당장 중단해야 함	기후변화 대응에서 미국의 리더십 발휘
에너지절약·효율정책	언급 없음	- 에너지효율 개선과 전력망 현대화로 가정, 학교, 병원, 사무실의 에너지낭비 절감 - 미국 제조업의 세계 최고수준의 청정성과 효율성 확보 - 미국 제조업부문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 - 차량연비 개선, 청정연료 및 전기차 보급으로 수송 부문 석유소비 감소 -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자료: 유학식(2016a)



4.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정책 전망

가. 미국 내의 원유·가스 증산 및 자원 수출 확대 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미국의 석유·가스 상류부문 개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도입되었던 석유·가스 메탄누출 규제 등 안전성 또는 환경성 강화 규제정책들은 완화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민주당의 힐러리 대선 후보가 공약하였던 북극, 대서양 연안, 연방 공유지 개발 제한의 가능성이 사라져서 석유 상류부문에 대한 투자는 더욱 용이해지고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석유 및 가스 인프라 투자 증대와 인·허가 신속화로 미국 내에서의 원유 및 가스의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석유·가스 상류부문에 대한 투자 및 생산은 규제요인보다는 국제유가로부터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국제유가가 높을수록 석유·가스 개발·생산업자들의 채산성이 좋아져서 생산량은 증가하게 된다. 그렇지만 동일한 국제유가 수준 하에서 기존의 개발규제들이 제거되고 개발가능지역도 확대된다는 점은 생산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미국 내의 원유와 셰일가스에 대한 생산이 증가하는 것은 국제석유시장 측면에서 저유가 기조를 좀 더 유지시키는 요인의 하나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IA의 U.S. Petroleum Flow(2015)를 보면, 미국의 경우에

석유에 대한 수요는 주로 수송용 소비이므로 향후에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⁵⁾ 이 점에서 미국 내 원유·가스수급에서의 초과공급을 의미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공언하고 있듯이 미국의 석유·가스 수출을 장려한다면 국제석유시장에는 공급 증가요인이 된다.

이에 비해서 셰일가스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공급이 확대되면 가스가격은 안정화되고, 가스화력발전이 비용측면에서 지금의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므로 미국의 가스발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더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산 원유와 셰일가스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수출 관련 인프라 건설을 촉진하고 인·허가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자원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출대상국과 양자 협상 및 다자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온실가스 감축정책 후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가 선택할 방향은 몇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그동안 트럼프 당선자가 공언하여 왔듯이 파리협정을 벗어나려는 선택을 하는 경우다. 이러한 방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협정에 대한 비준 무효화를 주장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준서의 무효화를 주장하기 위해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보다 쉬운 방법은 집행명령을 통해서 비준서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파리협정의 구속력을 부인할 수 있다.

5) EIA의 U.S. Petroleum Flow, 2015(<http://www.eia.gov/totalenergy/data/monthly/pdf/flow/petroleum.pdf>, 접속일: 2016.11.11)에 따르면, 2015년의 미국 석유소비는 19.4백만 b/d이며, 이 중에서 수송용 소비가 13.76백만 b/d이고 나머지 4.62백만 b/d는 산업용 소비임.



다른 경우는 파리협정의 틀 안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으로부터의 탈퇴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 유세기간에 대해서 당선 이후에 파리협정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탈퇴 신청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파리협정을 인정한 상태에서 정식 탈퇴절차를 밟는다면 최소 4년이 걸린다.⁶⁾

또 다른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의 비준을 인정하고 협정의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라도 하더라도 그동안의 트럼프 당선자의 발언이나 공화당의 정강을 고려하면, 미국 차기 행정부가 협정과 비준에 대해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미국은 풍부한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여력을 고려하여 트럼프 행정부가 신기후체제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상의 몇 가지 경우에서 어떠한 형태를 갖던 미국의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은 상실될 것이며, 그 점에서 신기후체제가 약화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신기후체제 입장에서 다행스럽다고 생각되는 점은 파리협정 탈퇴와 기후변화를 적극 부인하여 왔던 트럼프가 당선 이후에 EU, 중국 등의 주요 당사국들의 감축 노력을 동반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이 국가들은 트럼프의 당선과 이에 따른 미국의 파리협정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감축 노력과 신기후체제 지속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다. 신재생에너지산업 투자 둔화

신재생에너지 생산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 PTC),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ITC) 등과 같은 연방세액공제는 2015년 12월에 일몰이 연장되었다. EIA(2016)에 따르면, 풍력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는 2016년 100%, 2017년 80%, 2018년 60%, 2019년 40%, 풍력 외의 신재생에너지 전원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는 2016년 100%이다. 상업용 태양광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2016년~2019년 30%, 2020년 26%, 2021년 22%, 2022년 이후 10%, 가정용 태양광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2016년~2019년 30%, 2020년 26%, 2021년 22%이다. 각 항목에서 마지막으로 기재된 연도가 연방세액공제의 일몰시점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일몰기한 이후에 일몰기한의 추가적 연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신재생에너지 전원에 대한 투자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는 연방세액공제에 따른 비용보전효과에 의존하는 부분이 커서 지원정책이 중단되거나 일몰 연장이 되지 않으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위축되고 비중의 증가세도 둔화될 것이다. BNEF(2016)의 주(州)별 태양광 균등화발전단가를 보면 연방 투자세액공제(ITC, 30% 공제율 기준)와 설비투자액의 감가상각 소득공제 인정을 통한 세제 지원이 있을 경우에 발전단가 저감 효과는 25 USD/MWh ~ 60 USD/MWh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방정부 차원의 세제지원이 일몰된다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일부라도 위축되거나 그 증가세를 둔화시킬 것이다.

6) 파리협정의 탈퇴에 대한 조항은 파리협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협정의 발효 후 3년 이후부터 탈퇴 신청이 가능하며, 탈퇴 신청 후 최소 1년이 경과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탈퇴가 가능함.



한편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세액공제 일몰기한이 도래하기까지 아직 시한이 몇 년간 남아 있으므로 투자가 지속될 여지는 존재한다. 더하여 연방세액공제는 종료되더라도 주(州)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의 비용 감소, 지역별 잠재량 등의 여건에 따라서 주(州)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원별로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내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또는 전원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라. 청정전력계획(CPP)의 폐지 가능성 확대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서 청정전력계획(CPP)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CPP의 존폐여부는 이 재판의 결과에 달려있지만, 결론적으로 폐지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트럼프 당선자는 공화당계 기후변화 부정론자로 알려진 Scott Pruitt 현 오클라호마 법무장관을 EPA의 수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는 주(州)법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그동안 EPA의 화석연료 규제정책에 대한 반대소송에 앞장을 섰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차기 행정부에서 EPA는 CPP에 대한 반대소송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에서처럼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고 사실상 방어를 포기할 수도 있다. 1심 법원인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서 CPP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결되어도 EPA는 이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고 재판을 패소로 종결시킬 수 있다. 반대로 CPP가 합법하다고 판결될 경우에는 원고인 CPP 반대진영에서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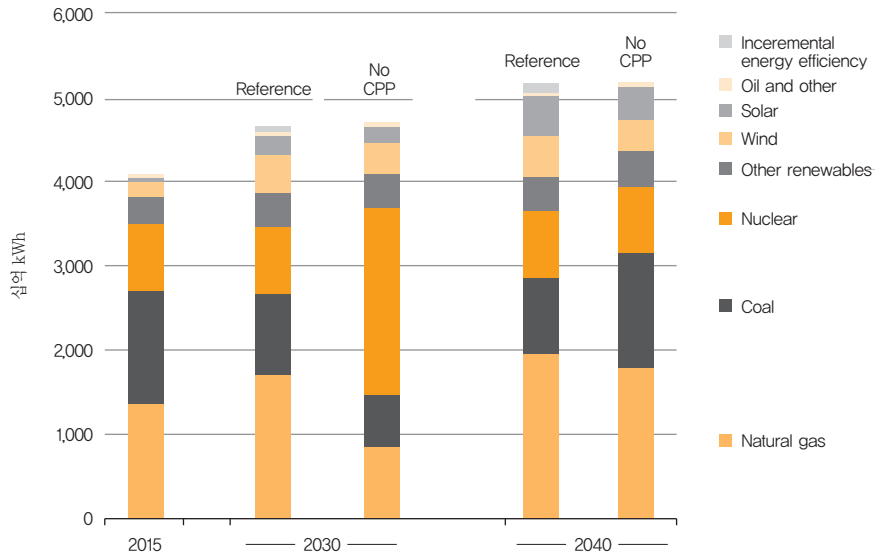
방대법원으로 항소를 하겠지만, 결국에 연방대법원은 다시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번 선거의 결과로 공화당은 차기 대통령, 상원의 과반수 의석, 하원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였다. 트럼프 당선자는 공화당 성향의 대법관 후보를 지명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상원에서 그대로 인준될 가능성이 높다.⁷⁾ 현재의 대법관 구성을 보면 1인의 공석으로 보수 대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4 : 4 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여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5명으로 증가하여 수적 우위를 가지면, CPP에 대한 최종 판결은 공화당에 유리하게 'CPP가 위법하다'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가능성은 낮지만, 연방대법원에서 'CPP가 합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EPA는 청정전력계획의 규제 기준을 현격하게 약화시키는 형태로 CPP를 개정하거나 심지어는 자체 폐지할 수 있다.

CPP가 폐지되면 지속적으로 축소 추세에 있던 석탄 화력발전량은 장기적으로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노후 화력발전기의 폐기 속도는 상당히 둔화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의 바람대로 원유 및 가스의 생산이 확대되고 천연가스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석탄화력은 전원 구성에서 다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어렵다. 더하여 중장기적으로 석탄화력발전의 설비용량에 대한 증가 계획도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PP가 폐지되더라도 천연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전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다만 전체 발전량 대비 비중은 CPP 가

7) 미국 연방대법원 재판부는 9인으로 구성됨. 현재는 1석이 공석임.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3월에 대법관 후보를 임명하려고 하였지만, 공화당 우위의 상원이 인준 심사를 거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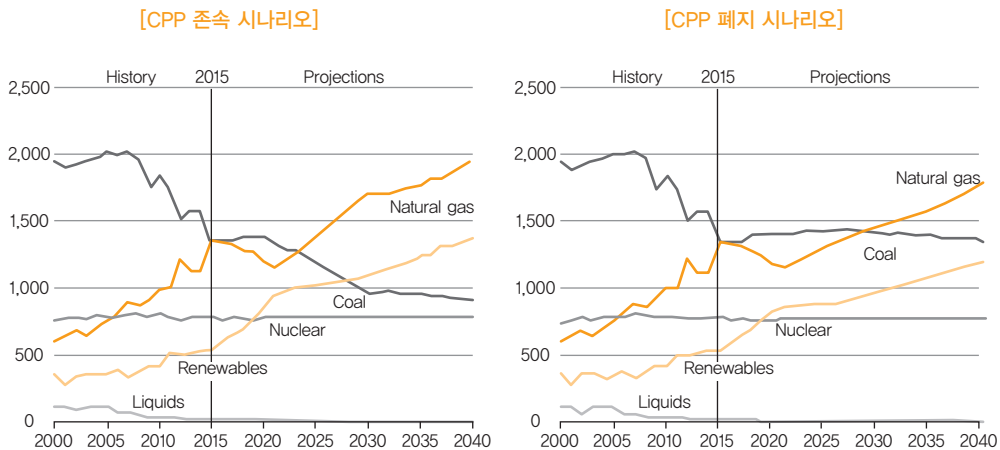


[그림 2] CPP 존속여부에 따른 에너지원별 발전량 전망 비교



자료: EIA, Annual Energy Outlook 2016 with projections to 2040, 2016.8, p. IF-16, 유학식(2016b)에서 재인용함.

[그림 3] CPP 존치여부에 따른 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 비교



자료: EIA, Annual Energy Outlook 2016 with projections to 2040, 2016.8, 유학식(2016b)에서 재인용함.



유지될 경우에 비해서 낮아지고, 증가속도도 소폭 둔화될 것이다.

5. 시사점

이상에서는 미국 45대 대통령 당선자인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 공화당의 대선 정강,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 정강 등의 비교를 통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 관련 정책을 전망하였다. 우리나라와 다방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의 에너지 및 기후 관련 정책의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자 한다.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신기후체제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추진동력이 약화될 우려는 존재한다. 그렇지만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계는 장기적 관점에서 친환경 공정과 효율적 에너지소비로의 전환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일관된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기후변화는 인류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며, 신기후체제 역시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에너지신산업부문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신재생에너지산업 지원정책 또는 에너지효율 개선 등을 축소할 경우에 신재생에너지 및 신산업 성장의 둔화가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의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내수 확대정책과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한 대비와 함께, 유럽 등과 같은 미국 외 지역으로의 해외 진출 활로 및 신시장 개척을 모색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청정에너지시장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므로

미국과의 클린에너지 협력도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석유·가스산업부문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의 원유 및 셰일가스 증산은 우리나라의 도입선 다변화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고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도입 경제성과 국내 수급 등의 여건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산 원유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처인 중동산 원유에 비해서 가격과 수송비의 측면에서 낮은 경제성을 갖는다. 그러나 2003년 이후의 유가 급등이나 2014년의 유가 급락과 같은 큰 변동성을 고려하면 미국 원유의 도입 경제성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미국산 원유수입을 도입선 다변화 측면에서 활용해야 한다. 천연가스의 경우는 2025년까지 체결한 장기계약 분량으로 국내 수요는 확보한 상태이므로 시장의 상황과 가격 변동성을 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유학식, “미국 대선 후보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공약 비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29호, 2016a
- 유학식, “미국 차기 행정부의 에너지정책 전망과 영향,”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42호, 2016b

〈외국 문헌〉

- BNEF, H1 2016 AMER LCOE Outlook, 2016.4.12
- EIA, Annual Energy Outlook 2016 with



projections to 2040, 2016.8

〈웹사이트〉

DOE 홈페이지, www.doe.gov, 접속일: 2016.12.10

Donald Trump 당선자 홈페이지, www.donald-trump.com, 접속일: 2016.12.10

EIA 홈페이지, <http://www.eia.gov>

_____, U.S. Petroleum Flow, 2015, <http://www.eia.gov/totalenergy/data/monthly/pdf/flow/petroleum.pdf>, 접속일: 2016.11.11

Keystone XL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www.keystone-xl.com>, 접속일: 2016.11.14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홈페이지, www.gop.com, 접속일: 2016.12.9

UNFCCC 홈페이지, 'Paris Agreement,' 2015 http://unfccc.int/files/essential_background/convention/application/pdf/english_paris_agreement.pdf, 접속일: 2016.11.16